

# 탈모치료제로 둔갑한 고혈압약... 안전성은 "글썸"

‘미녹시딜’ 알약 처방 중 90%가 탈모 치료용으로 쓰여 ‘현대미녹시딜’ 제외, 식약처 허가제품 모두가 비급여 부종 부작용... 고혈압 처방보다 15배 비싸 돈벌이 논란

고혈압 치료제로 허가받은 경구용 미녹시딜이 탈모를 적응증으로 허가받지 못했지만 오프라벨 처방을 통해 치료제로 비급여 탈모약으로 확산한 자리 잡았다. 다만 전문가들은 안전성 논의가 부족한 상황에서 시장만 확대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29일 본지가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실로부터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미녹시딜 경구제 청구 금액은 2022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3년6개월간 총 13억 원 내외로 파악됐다. 반면 유통업체의 의약품 시장 데이터 분석 업체 유비스트를 통해 추정된 경구

미녹시딜의 시장규모는 연간 100억 원대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업체가 보호한 2023년 생산실적은 약 70억 원대로 이를 고려하면 경구 미녹시딜의 처방은 비급여로 90% 이상 탈모 치료용으로 이뤄진 것으로 분석된다. 또한 1985년 허가를 받아 급여약가(79원)를 받은 현대미녹시딜을 제외하면 식약처 허가를 받은 모든 제품이 비급여 제품이다. 즉 급여가 되는 증후성 또는 표적기관 손상에 의한 고혈압과 기존 혈압약에도 반응하지 않는 불응성 고혈압 등 허가된 적응증과 급여되는 질환 치료제로

처방되기보다는 경구 미녹시딜은 탈모 비급여처방시장이 중심으로 성장하고 있다. 경구 미녹시딜은 1979년에 고혈압 치료제로 미국 식품의약품(FDA) 승인받은 품목이다. 임상시험 과정에서 피험자들이 몸에 털이 많이 나는 부작용을 경험하면서 부작용을 줄이는 방향으로 국소도포 제형의 탈모 치료제 추가 개발됐다. 이후 미녹시딜의 발모 효과를 활용하기 위해 두피에 직접 바르는 국소용 제형이 개발되었고 이는 1988년 FDA 탈모 치료제로 공식 승인받았다. 이후 머리에 바르는 국소도포제형의 미녹시딜 사용 불편과 높은 비용 대비 저용량 미녹시딜의 경구 복용이 비슷한 수준의 탈모 억제 효과를 발휘한다는 논문들이 속속 발표되면서 오프라벨 탈모 처방이 활성화됐다. 경구와 국소도포제형의 효과를 직접 비

교한 연구는 많지 않으나 저용량 경우 투약 시 매우 저렴한 치료옵션이라는 점과 투약의 편의성이 오프라벨 처방을 활성화하는데 큰 역할을 했다. 대다수의 해외논문이 탈모치료제 있어 고혈압 치료 용량보다 낮은 저용량 경구 미녹시딜에 처방에 대한 긍정적 효과를 제시하는 반면 국내 처방용량은 고혈압 용량인 5mg 1일 1회 투약부터 1/4 또는 1/2용량을 투약하는 등 처방하는 의사마다 제각각이다. 특히 5mg 투약시 높은 탈모치료 효과를 기대할 수는 있으나 부종 등 부작용 발생 가능성이 높아진다. 심지어 부종 등 부작용을 대치하기 위해 선제적으로 항알도스테론과 같은 이뇨제 성분을 함께 처방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 특히 탈모성지로 불리우는 일부 의료기관에서 이 같은 처방이 잦다. 의령을 요구한 대학병원 순환기내과 교



게티이미지뱅크

수는 “저용량 경구제제의 탈모치료제 가능성이 여러 문헌을 통해 일관성을 확인할 수 있고 유럽 일부 국가에서 처방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다만 안전성을 고려한 적정 투약 용량 등에 대한 충분한 논의나 검토가 없는 상황에서 고용량 투약이 적절하지는 고민해볼 문제”라고 설명했다. 이어 “부종 등 부작용을 고려해 이뇨제까지 포함시키는 처방은 과한 부분이 있다”고 덧붙였다.   
허승아 기자 heosa@skyedaily.com

## 與, 노동계와 정책협의... 정년 연장·주4.5일제 핵심 의제

한국노총과 현장 요구 반영한 입법과제 논의 향후 국회·경제계와 주요 쟁점으로 부상 예상

더불어민주당과 한국노총이 정년 연장, 주4.5일제 도입, 교원 정치기본권 보장 등 굵직한 노동 의제를 놓고 본격적인 정책 협의에 돌입했다. 양측은 고위급 정책협의 회를 통해 현장 요구를 반영한 입법 과제

를 논의하며, 향후 국회와 정치권의 주요 쟁점으로 부상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29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노총 사무실에서 열린 ‘한국노총-민주당 2025년도 제1차 고위급 정책협의회’에는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과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참석했다. 김 위원장은 △주4.5일제 도입 △정년 연장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 권리 보장 △교원 공무원의 정치기본권 보장 등을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김 위원장은 “금융노조가 주4.5일제 도입을 위해 총파업에 돌입했다”며 “과거 주5일제 도입을 주도했던 금융권의 전례처럼 이번 제도 역시 노동시간 단축의 촉매제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한 “국민연금 수급 연령과 정년의 불일치를 해소하고 저출생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정년 연장은 불가피하다”며 “민주당 태스크포스(TF)가 가동된 만큼 올해 안에 반드시 입법을 완료해달라”고 당부했다. 정 대표는 이에 화답하며 “민주당은 중대재해처벌법과 노란봉투법으로 노동자의 권익을 지켜왔다”며 “주4.5일제를 단계적으로 도입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보다 긴 노동시간을 줄이는 데 한국노총과 함께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보편적 노동권 보장, 사회보장제도 강화, 노후 소득과 돌봄·의료 책임



김동명(왼쪽) 한국노총 위원장이 29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노총에서 열린 한국노총-더불어민주당 2025년도 제1차 고위급정책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하겠다”며 “택시발전법 개정, 울산·여수 석유화학단지 노동자 보호 등도 추가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번 협의를 계기로 한국노총과의 정책 소통 구조를 정례화하고 현장의 요구를 입법에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정년 연장과 주4.5일제 도입은 중장년층 고용 안정, 청년층 일자리, 기업 부담 등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어 향후 정치권의 핵심 쟁점으로 부상할 전망이다. 교원 정치기본권 보장 문제 역시 공직자 정치 활동 범위를 둘러싼 논쟁을 촉발할 가능성이 크다. 노동계와 민주당의 이번 협의는 내년 총선을 앞두고 정책 경쟁 구도의 서막이 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노동 친화적 개혁 과제를 전면에 내세우고, 한국노총은 “현장의 요구가 외면된다면 언제든지 투쟁에 나설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면서 협상력을 높였다. 이번 논의의 결과는 향후 노동시장 제도 개편뿐 아니라 산업 정책 환경과 정치 지형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이유경 기자 leeyk@skyedaily.com

스카이만평 김용덕

비쁜 일상 속, 당신을 토닥여줄 요가 에세이

# 느려도 괜찮아

아사나(요가 자세)를 할 때 찾아오는 고통은 말할 수 없이 아팠지만 몸을 늘리고 비틀고 거꾸로 서는 과정에서 마음이 말을 걸었다.

너무 애쓰지 마라.

괜찮아.

일만 하지 말고 좋아하는 것도 하고 살아라.

한영임 지음 | 272쪽 | 15,000원 | 도서출판행복에너지